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최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임기 이후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여섯 차례의 5분 발언, 그리고 한 달 전 진행했던 시정질문까지 쉽 없이 달려오는 동안 필자는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았는데, 흠어져 있는 이 문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바로 ‘상생’이라고 하겠다.

지난해 임기 시작과 함께 처음 진행한 5분 발언의 주제는 “광주형일자리, 희생이 아닌 상생의 일자리로 바로서야”였다. 광주형 일자리(GGM)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정치형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는데, 이 5분 발언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처음 화두로 던졌기에 발언 내용을 옮겨본다. “상생(相生)이라는 단어는 ‘서로를 살려준다. 서로를 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GGM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만큼 상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상생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후 진행했던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뤘다. 광주시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공론화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를 대변하고 가해자였던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다음 5분 발언에서는 광주 시청의 직장갑질 문제를 짚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시청 공무원은 56.1%로 절반 이상이며, 최근 3년간 광주시 산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32건에 달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전했다. 이는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던 직장갑질 업무를 일원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 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가슴아픈 평동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에는 산업 재해에 대한 광주시의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민간 영역이더라도 공공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후 광주시는 민간 기업을 위한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사업과 함께 3대 사망사고(자살, 산재,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보육 대체교사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상생’은 주요 쟁점이었다. 첨예한 대립을 딛고 양측이 합의한 것은 결국 서로를 위하는 상생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채로 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사정에 공감했고, 노동자들은 재정 여건과 시스템상 한계 등을 이유로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시의 입장을 이해했다. 225일 동안의 시정 1층 로비 농성은 그렇게 종료되었다.

올여름 예산안 추가경정안 심사에서는 ‘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행정 절차상 위반을 밝혀내 예산을 삭감했다. 교통약자와의 상생을 위한 복지제로서 도입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오늘날, 한 해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돼 버렸고, 필자는 소관부서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한 시정질문에서도 ‘상생’은 중요한 키워드였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 건에

대해 점검하며 광주와 전남도의 협치를 촉구했고, 경제진흥원에 흡수된 노사상생일자리재단이 과연 노사상생의 교두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강기정 시장에 게는 목적지에만 빠르게 도착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길’을 가자고 청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시 금고의 전국 최저 수준 협력사업비 현황을 고발하고 지역 상생을 주문했으며,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140여 개 기업과 함께 대우위니아 그룹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사상생, 광주시 및 기업과 시민들과의 상생, 광주와 전남도의 상생….

‘상생’의 키워드 아래 고군분투했던 일 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았다. 필자의 미진한 노력으로 우리는 조금이나마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위해 주게 되었을까.

칼럼 제목으로 사용된 문장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최근 읽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저자는 시작하는 글에 루인의 유명 구절을 인용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제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어느덧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기로 소망한다.

필자가 앞장서서 덩불도 걷어내고, 돌부리도 치우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출고 어려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올겨울, 같이 가면 길이 된다.

社說

이젠 COP33 유치에 국가 역량 모아야

전남도, 두바이서 유치 선언

대한민국이 염원했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전남도가 2028년 개최되는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유치단은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김 지사는 30일 총회 첫날 ‘COP33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와 여수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12개 시·군이 포함된 남해안 남동권에서 33차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199개 나라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COP는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없다. COP는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가 28번째다.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협약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는 지난 2021년 제28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해오다 COP33 유치로 전환했다. 정부 차원에서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양보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영·호남이 함께 유치에 나선 COP33에 앞서 2030세계엑스포의 부산 유치가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와 후발주자라는 열세에도 정부·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COP33 유치에 집중할 때다.

COP33의 주요행사가 열리는 여수는 ‘기회의 땅’이다. ‘해양’을 주제로 한 ‘2012 여수엑스포’가 성공을 거두면서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우뚝 섰다. 엑스포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려했던 부산의 꿈은 이젠 영·호남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COP33 유치로 남해안 남동권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젠 ‘두번의 실패는 없다’라는 각오로 정부는 COP33 유치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음주운전, 경찰 선제적 대응 환영한다

광주경찰 2개월간 집중 단속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다.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까지 앗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대응을 응원한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2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3명에 이른다. 다행한 것은 부상자가 1년 새 662명에서 521명으로 21.3%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과 달리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 달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13만여 건, 사고는 1만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음주운전자의 대다수가 ‘상습범’이라는 것이다. 발생 시점도 오전·오후 가릴 것 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장소나 사고다발지역, 주요도로·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벌이겠다는 광주경찰의 의지는 어찌 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숙취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에 따른 중대 사망 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도 압수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구호’를 넘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술관의 ‘인질광장’으로 알려진 곳에서 한 여성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묘사한, 묶여 있는 빈 의자 설치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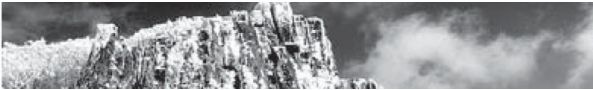
텔아비브=AP/뉴시스

서석대

“주요인 여객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설과 유통 등 유망사업에 과감히 진출하겠다.” 1989년 9월,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놔다. 항공운송의 발달과 철도의 고속화로 광주고속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설과 레저, 유통 등은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가능성이 큰 만큼 금호의 미래를 위해 이 부문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금호건설과 광주 북구 생원동에 건설된 광주 패밀리랜드였다.

‘광주에 제대로 된 백화점’을 만드는 것도 그의 꿈이었다. 1987년 광주시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광천동으로 이전키로 결정하자 박 회장은 친동생인 박정구 부회장과 함께 금호그룹이 건설하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건립을 위한 설계에 들어갔다. 유통의 대동기, 지금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한 신세계백화점처럼 터미널과 백화점을 함께 만들겠다는 30년을 앞선 해안이었다.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전국 4대 상권으로 떠오른 광주에 걸맞은 유통시설을 만들고 싶었다.”는 게 박성용 회장의 회고다.

하지만 백화점 건설의 길은 험했다. 당장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높았고 특허논란에 따른 광



주시의 미온적인 태도도 난제였다. 유통업에 대한 노하우나 manpower도 부족했다. 임대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사업권 확보를 두고 신세계와 롯데의 경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갈자루를 쥐고 있던 금호는 고민 끝에 신세계와 손을 잡고 백화점 사업에서 물러났다. ‘광주신세계의 출범은 신세계 고위층과 금호 경영진의 정부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 금호의 설명이다.

그로부터 30여 년, 광주신세계가 새 백화점 확장 부지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확정했다. 터미널 부지 일부를 매입해 현재 사용중인 백화점과 연결한 복합 유통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광주신세계의 복안이다. 그야말로 새옹지마다. 사업권을 얻기 위해 금호에 협력했던 신세계는 불과 30여 년만에 금호로부터 갈 자루를 받았고 이제는 어떻게 그 칼을 쓸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의리다. 정무적 판단으로 진행됐던 그 옛날이야말로 금호와 광주신세계가 잇어선 안될 과거가면서 현실이다. 지난 2005년 타계한 고 박성용 회장은 왜 신세계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까.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부터 이어져 왔던 74년 금호의 꿈이 정무적으로 결정했던 신세계를 불씨로 다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